

이동전화보조금 금지 입법화 대응

< 본회 휴대폰협의회 >

본회는 이동전화가입보조금(일명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최근 입법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제조업계(휴대폰산업협 의회 13개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본회의 건의 요지는 크게 3가지인데

첫째, 최근 입법을 추진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보조금 지급 금지에 관한 조항 신설은 관련산업의 심각한 침체 야기와 사업자와 국민의 자율권 침해 등 명백히 문제가 있으므로 반대하며

둘째, 아울러 지난해 6월부터 정부주도로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개정케하여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 등 마케팅 정책을 시장 자율화에 맡기고 (이동전화사업자 이용약관 개정)

셋째, 보조금 과다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

지하고 사업자 및 가입자 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약정사용기간(일명 '의무사용기간')제도를 동시에 적용(이동전화사업자 이용약관 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제조업계가 보조금정책을 정부가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사유는.

- 1) "CDMA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이동통신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의 확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내수시장의 안정이 필수
 - 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대통령보고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Mobile Vision 2005」등 이동통신산업 육성시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내수시장에서의 뒷받침이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다.
 - 현재 CDMA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제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유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서비스를 개시, 국내시장

을 활성화하여 확보한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을 적극 공략하였기 때문이다.

- 1996. 4 : 세계 최초 CDMA 이동전화서비스 개시(IS-95A 방식=14.4kbps)
- 1999. 8 : 세계 최초 IS-95B 서비스 개시(최대 114kbps)

○ 따라서 지금은 무선인터넷 활성화와 이를 통한 단말기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 2000. 10 ~ 2001. 5 : 세계최초 cdma2000-1x 서비스 개시(144 kbps)
- 2002년 상반기에는 1x보다 대폭 기능이 향상된 EV-DO(Evolution-Data Only) 서비스를 역시 세계최초로 시행 예정(2.4Mbps)

2) 2002 월드컵은 한·일간의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기의 경쟁력이 비교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적극 대비 필요

○ 일본은 세계적으로 우리와 휴대폰 및 이동통신서비스분야에서 가장 경쟁 관계에 있다.

- 무선인터넷분야에서는 i-mode로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으로 인정받음
- 휴대폰 보급율은 우리와 같은 수준이나 무선인터넷 기능 단말기, 특히 컬러폰 보급율은 70% 수준으로 우리에게 비해 월등(우리는 현재 10% 미만)

○ 월드컵 시기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동통신산업의 수준 즉, 경쟁력이 그대로 드러나며 이는 향후 해외마케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 그러나 지금처럼 우리나라만 사업자 이용약관으로 보조금을 금지하거나 법제화하여 규제를 강화할 경우 일본과의 격차는 오히려 더욱 심화 될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의 i-mode 성공에는 콘텐츠의 발달과 함께 사업자의 보조금마케팅을 통한컬러폰 등 인터넷 기능의 단말기 대량 보급이 주요인

3) 마케팅수단을 법으로서 제한함은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세계적으로 보조금을 정부가 규제하는 경우는 없음)

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치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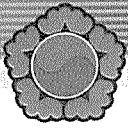
우리나라도 특히 정보통신분야의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과 같은 마케팅 수단을 자본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함은 규제완화 정책과도 맞지 않다.

현재 휴대폰 분야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국가들(미국, 일본, 유럽 각국 등) 뿐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 중 보조금지금이 규제되고 있는 국가는 부재하다.

4) IT산업 침체 극복 측면

이동통신산업은 단말기, 부품, 임가공, 기지국, 중계기 등 시스템, 콘텐츠 산업 수만개의 사업체로 구성되어 IT산업 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핵심산업으로 부상하였다.

보조금지금을 지금처럼 계속 금지하고 더구나 이를 법제화하여 강화함은 관련산업에 연쇄적인 침체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내수시장 침체는 수출경쟁력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하여 설비 가동율의 저하로 설비투자 대비 효율 저하, 단말기 공급가격의 하락으로 채산성 악화, 구매물량 축소로 부품(수입)구입단가 상승, 내수시장 위축으로 수출에서는 오히려 국내기업간 경쟁 과열을 초래 할 것이다.

한편 제조업계는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약정사용 기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보조금 과다지급으로 인한 문제는 약정(의무) 사용기간의 폐지에서 비롯('99년 4월 정부 주도로 의무사용기간을 전면 폐지)되었다.

의무기간이 없어지자 가입자 특히 젊은 층에서 지나치게 잦은 단말기 교체 현상이 나타나는 등 보조금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 당시 의무사용기간으로 인한 폐해는 PCS 등 이동전화서비스 도입 초기에 사업자 또는 대리점(유통점)들이 지나치게 가입자 확보에만 치우쳐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약정사용기간이 있음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은데서 발생

따라서 대안으로는, 보조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원인인 의무사용기간 금지정책 재고 즉, 지나치게 잦은 단말기 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사용조건을 전제로 보조금 지급(약정사용기간제도 도입)하면

· 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최소한 일정기간(예:1년)의 사용조건이 있음을 가입자에 확실히 주지시키고 계약서를 체결 해야 한다.

· 이용자는 일정기간을 쓸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저렴한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가입비용이 비싸더라도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방법중에서 선택하며

· 정부는 사업자와 가입자간에 합리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지켜지는지, 사업자간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하면 서비스사업자는 최소한 지급된 보조금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가입자는 선택의 폭이 늘어날 뿐만아니라 제조업계도 수요의 변동폭이 적어져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이동통신산업을 반도체와 함께 양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여 2005년에 연간 수출 350억불을 달성한다는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본회는 휴대폰산업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에 건의문을 제출하였으며, 청와대와 국회 등에도 제조업계의 입장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